

# 납부기한연장제도의 활용 및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의 불이익

상담실 백종훈 차장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산, 협력업체의 납품 중단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자금 상황이 경색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과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납부기한내에 미납부시 각종 불이익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에 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재산의 압류나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 ① 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미납세액×미납기간(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22/100,000의 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를 합산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 ②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사업의 정지·허가의 취소도 할 수 있으며, 출국규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행정규제도 뒤따른다.

##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요건 및 승인절차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 자진신고납부세금의 경우「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물론 누구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 ◆ 납부기한 연장사유 ◆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종인 경우
-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위의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결정되는데, 연장 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고지서를 받은 세금의 경우에도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